

이명박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설명

■ 핵심 10대 공약

1. 한미FTA, '선대책 후논의'
2. 악성농가부채해소 '부채동결법'으로 해결
3. 농림부를 '농업식품부'로 전환
4. '농지거래 규제완화'로 재산권 보장
5. '유통구조 개선'으로 돈 버는 농업
6. 공격적 '수출 농기업' 육성
7. 농촌에도 '공평한 교육해택'
8. 농촌 기초생활보장, 여성농업인 지위향상
9. 농림어업계의 의견수렴 기구 설립
10.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

1. 한미FTA, '선대책 후논의'

- 농업인소득보전특별법 제정
- 소득직불제 예산, 농림예산 35%로 확대
 - 현행2조1천억원 → 3조5천억원 이상
-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
 - 80kg당17만원이상소득보장
 - 연간 소요예산 5천억원
- 비료,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안정화
 -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품목 확대

2. 악성농가부채해소 '부채동결법'으로 해결

- 농가부채동결에 관한 법률 제정
 - 농업연간 총 매출규모 36조원/ 반면 농업부채 48조원 부채 악순환
- 농지은행의 정부출연에 의한 농지기금 설치
 - 5년간 총 10조원 규모
 -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, 이자 동결
- 말긴 토지의 경작 통해 20년간 분할 상환
- 부채 상환 못할 경우→농지시가 재평가 상환
- 농신보 확대로 농업인 담보력 지원 강화

3. 농림부를 '농업식품부'로 전환

- 식품산업과 연계,신성장동력 도약
 - 식품산업업무를 농림부로 이관/ 식품산업 규모 연간 100조
 - 농장에서 식탁까지,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
 - 전통식품산업 개발에 농가들 참여 확대
- 수입 농식품을 국산으로 대체, 수출 농식품의 획기적 확대
- 생산, 가공, 유통 산업 시너지효과로 일자리 창출
- 생산자 제 값 받고 소비자 싼값에 사는 유통혁신

4. '농지규제 완화'로 재산권 보장

- 공공기관, 농업단체, 기업 등 문호개방
 - 토지의 실수요자에게 진흥지역 내 토지이용
-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
- 산업용지 및 택지의 원활한 공급
- 농지 거래 및 전용 등 농지이용 규제완화



5. '유통구조 개선'으로 돈 버는 농업

- 사이버거래 등 농산물유통단계 축소
 - 1차 산업의 농업을 2차 상품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
- 원산지표시 강화, 생산이력제 도입
- 농협의 역할 기능 재정립, 유통 활성화
- 농업관측의 체계화, 자조금 조성

6. 공격적 '수출 농기업' 육성

- 수출농식품 기업과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 육성
 - 연 매출 1조원 이상 수출 농기업 10개 육성
 - 1천억 이상 지역기반 농기업 100개 육성
- 농업과 식품산업 결합 시너지
- 한국음식의 세계화 등 한류 특화
 - 농림부 차원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추진
 - 한식조리학원 설립지원
 - 한식 세계화 추진센터 운영
- 부가가치 증대,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

7. 농촌에도 '공평한 교육해택'

-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설치
-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 할당제 실시
- 농촌출신 학생의 기숙비 지원
 - 06년 농촌출신 대학생 36만명, 농업인 대학생 자녀수 14만명
- 농촌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
- 귀농인 창업교육, 정책자금 지원, 경영 컨설팅

8. 농촌 기초생활보장, 여성농업인 지위향상

-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확대
 - 농어촌 전기시설 75%보급→100%달성
 - 농어촌 상수도 35.8% / 하수도 52.9%→100% 달성
- 고령농 은퇴시 생활자금 지원
 - 10년이상 영농 종사 농업인 은퇴시 자금지원
-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
 - 총 농민 중 여성농업인 53%(174만명)로 많음에 따라 직업인으로 법적 지위 보장
 - 농가 도우미 영역 출산에서 간병, 교육까지 확대
-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실시
 -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군 단위 1개소씩 설치

9. 농림어업계의 의견수렴 기구 수립

- 농정협의체계인 농업회의소 설치
 - 농업개방화 시대에 농민을 비롯한 범 농업계 권익대변과 정책변명을 목표로 하는 전담기구 설립 필요
- 농업현장 정책수립, 정부정책 사전협의 및 농정 자문활동을 통해 의견 수렴

10.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

- 북한농업의 자생력 회복
 - 현재 식량자급률 27% / 쌀 제외시 5%
- 농업분야 협력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북한지역 녹화, 치산치수 사업지원
-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 조성